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195
----------	------

제출연월일 : 2024. 9.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 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 ----- ----- ----- ----- ----- -----.
1. ~ 4. (생 략)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u>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u> 1. <u>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u> 2. <u>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u>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

<p>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 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	---